



5면

전주덕진공원, 중·장기 확장 본격 추진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음 12월 4일) 제390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전북자치도·전주·김제·완주, 혁신도시 악취 해결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역 환경 현안에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 혁신도시 악취 해결 '한뜻'

전북도·전주시·김제시·완주군, 재원 분담 협력  
축사 27농가 매입 340억 투입... 2029년 완료 목표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정주환경 조성 협력대응

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축사와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김 지사, 완주 방문 잠정 연기

전북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인근 3개 시군이 힘을 합쳤다. 행정구역의 벽을 허물고 사업 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이 공동 재원 분담에 나선 이번 협력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21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 대상지역인 김제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 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의 골자는 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남아있는 현업축사 27농가를 매입·철거하는 사업의 지방비 분담이다. 총사업비 340억원 가운데 국비 238억원(70%)을 제외한 지방비 102억 원을 전북자치도 30%, 김제시 50%,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 10%씩 나눠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토지매입비 244억원과 축사철거비 96억원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라 도는 협약기관 간 협의·조정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

처 건의, 사업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를 맡는다. 김제시는 사업 시행과 추진상황 보고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및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담당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방비 분담과 함께 악취저감 관련 연계사업에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시작된 1단계 매입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환경부는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용지면 특별관리지역 내 53농가 중 26농가를 매입 완료했다. 나머지 27농가는 새민금 사업비 개정으로 매입 기한이 4년 연장되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신암, 신흥, 비룡마을 일원으로, 축사 부지 8만9,238㎡와 축사 건물 3만18,679㎡가 철거 대상이다.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용지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는 2021년 15.8배에서 2025년 8.0배로 약 50% 줄었다. 그러나 연평균 20건 이상의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는 등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잔여 축사 전량 매입이 완료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는 축사 매입과 더불어 종합적인 악취 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 용지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완주군 방문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도지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의 방문이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이번 방문이 완주의 현안을 직접 듣고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일정이었음을 강조하면서도, 지역 사회 내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현재 완주는 중요한 분기점에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만큼, 완주군의회와 지역사회가 충분히 숙의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완주를 사랑하는 국민의 진심에서 비롯된 의견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다만 통합 논의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방문 연기가 완주와 전주의 상생 발전 나아가 전북의 답대한 도약을 위한 다짐들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만호 기자

##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재판부,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해당" 판단  
"총리,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 해야" ... 韓, 법정구속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환)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9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

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 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는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험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 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중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뉴스

### "농생명 기반 국가전략 강화해야"

민주 이원택 의원, 전북자치도 출범 2주년 세미나서  
"전북, 정부 5극 3특 시대 대비 분명한 전략 갖춰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 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의 민생행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나후 전북 탈피를 위한 농생명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생존 전략을 제시해 주목된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시대에 전북이 분명한 전략이 없으면 번방으로 밀려난다"며 "전북은 농업생명과학을 중심으로 국가 생존 전략을 책임지는 핵심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강당에서 전북미래산업R&D포럼 주최로 열린 '전북자치도 출범 2주년 기념 5극 3특 시대 전북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 성장 구조를 넘어 5대 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 전략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전북이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5극 중심으로 설계된 상황에서 전북이 분명한 전략을 갖지 못하면 국가 지도에서 번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전북이 강점을 가진 식량·식품안보 분야에 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농생명 기반 국가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가 대학 정책과 연구개발(R&D) 사업이 수도권과 공과대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대 육성 정책과 피지컬 AI 같은 국가 핵심 사업이 전북의 농생명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 육성 사업과

피지컬 AI 사업이 제조업·휴머노이드 중심 구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농기계·농업로봇·식품·축산·스마트농업 등 실제 농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농생명 기반 AI로 확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박경현 센터장이 "5극 3특 시대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새로운 국토공간 구조 속에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임성진 전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의 5극3특 대응 전략과 실질적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새민금 지역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지방수도 균형발전의 비전을 전북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권대 당대표와 함께 강력한 삼각평대를 구축해 전북을 지역균형발전시대의 주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권희성 기자

부안군

謹賀新年

# 2026

2026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맺어온 열매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

結實蒼來